추락사 원인 밝혀진 무등산 구름다리 석달 넘게 폐쇄 왜?

행정편의주의에 막힌 산책길

동구청 "개보수 요청 경찰이 거부"

동부서 "요청 받은 적도 없다"

시민들 "전형적 탁상행정" 불만

추락사고로 폐쇄된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지구 내 산책로 구름다리.

사고 100일 지났어도 무등산 산책길 여 광주 동구가 60대 여성 추락사 후 3개월이 넘도록 사고 지점인 무등산 산책길을 폐쇄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미 사고원인까지 모두 밝혀졌지만, 앞으로 예정된 민사소송에 대비한 현장 보존과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의 개통 거부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동구의 해명이다.

지역민들은 이 같은 동구의 더딘행정에 대해 주민편의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광주 동구와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지구 내 산책로 구름다리 있던 한모(여·69)씨는 기대고 있던 난관이 파손되면서 구름다리 3m 아래로 떨어졌다. 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숨졌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다리 관리 부실에 따른 난관 붕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사고 후 3개월이 넘도록 관계 공무원과 다리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고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동구청은 경찰측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개·보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산책로도 폐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곳 산책로를 이용해 온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찾아간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지구내 산책로 구름다리는 여전히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노란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등산객과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날 무등산 산책로를 찾은 김윤택(61·광주시 북구)씨는 "구름다리 산책로는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면서 "난간만 수리하면 될텐데, 100일 넘도록 고치지도 않고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경찰의 더딘 수사 등을 핑계로 대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나중에 민사소송 문제 가능성 등이 있어 다리를 보수하지 않고 폐쇄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련 민원이 많아 동부경찰에 개·보수를 하겠다고 수차례 요청도 해봤지만, 거부해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는대로 담당과에서 개·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당분간 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동구청의 이 같은 반응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개·보수를 하겠다는 동구청의 요청은 들은 바 없으며, 다리의 개·보수는 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경찰이 이를 막을 권한도 없다"면서 "다리를 개·보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될 텐데 (동구청이) 왜 방치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감식결과 설계상 문제는 없었지만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드러난 만큼 현재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인 사륜오토바이(ATV)를 탈 때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사고 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A씨에게 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급여로 976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부담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고지처분을 했다.

이에 맞서 A씨는 공단 부담금 환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강태희 부장은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음주운전하다 전봇대 충돌
광주서부경찰, 3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A(39)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24%로 측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농업인의 날'인 11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과 농민들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차 차량 치고 전화번호만 남기면…사고후 미조치 처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지 않고 본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2월 10일 자정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방치한 채 사라졌다.

도로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종이에 적힌 이씨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견인차가 와서 사고 차량을 치웠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는 오전 4시 50분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대법원은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2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화물차에 실린 차량용 배터리 도로위 쏟아져 출근길 정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차량용 배터리가 쏟아져 출근길 정체를 빚었다.

1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호남고속도로 북광산나들목에서 A(42)씨가 몰던 25t 트럭에 적재된 차량용 배터리 1000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 사고로 배터리에 들어있는 황산이 소량 유출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화학안전관리단이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 정도 출근길 정체를 빚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법원 "공개 거부 취소" 판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비록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옆자리 여성 허벅지 갑자기 '쓰윽'

쌍나팔

○…늦은 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진 50대가 벌금형.

○…11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최재원)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 2월 8일 밤 11시 30분께 부산시청역을 출발해 연산동역으로 이동 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탑승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50대 여성 B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왼쪽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극심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연합뉴스